

서울버스, 사모펀드 '먹튀' 막는다... '도보 5분' 대중교통 추진

서울시, 시내버스 3대분야 혁신

민간자본, 공공성 훼손 우려 해소
외국계 자본·운용사 진입 금지

'차고지 임의매각' 임차료 비지원
단기간 청산·이탈 사례 원천차단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버스회사를 인수한 뒤 단기간에 재매각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불건전한 자본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일명 '먹튀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놨다.

서울시는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공공성', '재정', '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성공한 정책이었는데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 버스의 경우 고쳐야 할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22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사모펀드라고 하는 민간자본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업계에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참으로 통탄할만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공공을 물렁하게 본 거다. 저로서는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은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극도의 인내심으로 그동안 참아왔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저의

결심 하에 그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왔던 대책을 오늘 발표한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이달부터 민간자본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들이 서울시내 버스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시는 엄격한 진입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 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회사 평가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를 막는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다시 팔면 회사 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재정 혁신도 단행한다. 오는 2026년

부터 시는 운송 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는 '사후정산제'를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를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 방식도 상향선을 정해 채워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내후년부터 시는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세력권'(대세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굴곡도 높은 시내버스 노선을 펴고, 장거리·중복노선을 줄이는 동시에 맞춤형 버스를 늘릴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노선엔 '2층버스'를,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에는 '차량주행버스'를,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반드시 실현해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직장내 괴롭힘 산재승인 5년만에 9배 늘어

고용노동부 국감

작년 185건, 올해 8개월간 129건
3년간 과태료 처분은 476건 달해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8월 동안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2019년 이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



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사용자 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으로, 그 외에 ▲부당한 사조치(128건) ▲협박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가 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 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내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태환 기자 kdh@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 '역대 최고치'

한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배추 61%, 토마토 61% 중심 상승
국제유가 하락에 전체 지수는 하락

폭염으로 배추와 토마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생산자물가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4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25.81로 한달 전과 비교해 5.3% 상승했다. 지수 기준으로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부문별로 보면 농산물이 전월대비 5.7% 상승했다. 배추 61.0%, 토마토 51.1%, 상추 43.7%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축산물도 돼지고기(16.1%), 쇠고기(11.1%)를 중심으로 8.2% 상승했다.

양나경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과장은 "9월 추석까지 폭염 등 기상악화

영향이 계속돼 배추, 토마토 등 채소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소고기도 명절수요 때문에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산품은 한달 전과 비교해 0.7%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석탄·석유제품(-6.3%) 및 화학제품(-1.2%) 등이 떨어진 영향이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전력(13.9%) 및 산업용도시가스(0.8%)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9% 올랐다.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및 운송서비스(-0.5%)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비정규직 임금 사상 첫 200만원 돌파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은 379.6만원 '격차 최대'

비정규직 임금이 사상 처음 200만 원대에 들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12만1000원 오른 31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년 전보다 9만1000원 늘어난 204만8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었다. 하지

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7만3000원 오른 379만6000원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74만8000원에 달했다.

다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9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9만6000원 올랐다. 임금 뉘퉁기가 심한 시간제를 제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83만9000원이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3만7000명 증가한 84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1년 전과 비교해 1.2%포인트(p) 커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5명 중 2명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오가노이드-반려동물 시장 동반성장 기대"

>> 1면 '동물용 오가노이드...서 계속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의약품의 제품 인증 절차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사용목적 ▲원료 의약품 분량, 효능·효과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7일 이내 이루어진다. 독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특정 사료를 먹은 반려견과 반려묘가 다수 사망하는 일명 '죽음의 사료' 사례가 지속 발생하며 체계적인 안전성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동물용 오가노이드 플랫폼이다. 실제로 그라스메디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 현재 판매중인 반려동물용

텐탈, 삼푸, 유산균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그라스메디의 박형준 연구소장은 "동물용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더욱 실질적인 안전성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오가노이드 기반 반려동물 제품 개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오가노이드 기술과 반려동물 시장에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처음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표준화 작업도 시작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단체인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는 현재 동물용 오가노이드를 활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 기준을 마련하는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lee@